Since 1969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행복 금융 날개단는~

광전매일신문

유디철강(주) 철근공장 기계가공
철근 · 철강재 도 · 소매
유디기업(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계
대표이사 신 현 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8번로 14-9(연산동 1280)
TEL : 062-942-7577 FAX : 062-942-7576
MOBILE : 010-2645-5325 E-MAIL : ud7577@naver.com

대표전화 062-525-9775 gjnews.kr FAX : 062-528-4566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김원이(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통합, 선언에서 최종합의까지… 숨 가빴던 25일

지난 2일 광주 5·18 민주묘지서 "대통합" 선언
시·도, 행정통합 전담조직 구성…실무협의 착수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등 4차례 집중 간담회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지 25일 만에 시·도 통합의 기틀이 마련됐다. 통합선언부터 시·도의 뜻이 담긴 특별법안 마련까지 숨가쁘게 이어진 지난 20여일 간의 일정을 되짚어 봤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들에게 헌화·참배한 뒤 시·도 대통합을 선언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인구감소와 산업 대전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불가피하다'며 통합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단위 경쟁력 확보와 재정·권한 확대를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제시했다.

선언 이후 양 지자체는 각각 행정통합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통합 모델과 권한 이양 범위, 재정 특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통합 추진 일정을 구체화 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통합 절차와 시·도의 요구사항 등이 담긴 특별법 초안이 마련되면서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졌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시·도지사와 1차 조찬간담회와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지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특별법 검토 2차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1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통합에 따른 전반적 사안을 논의·검토했다.

이어진 2차 간담회에서는 특별시 명칭과 주 청사 배치 문제, 재정 지원 의무와 재정 특례, 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총 300여건에 이르는 광주·전남 특례 사항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이뤄졌다.

지난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가안)로 잠정 합의했다.

논란이 일었던 청사와 관련해서는 광주시청·전남도청·전남도 동부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도청(가안)으로 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가안에 대해 강 시장은 지난 26일 "주 청사는 광주로 해야 한다. 광주로 되면 어떤 명칭도 수용하겠다"며 전남도청을 주 청사로 하는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 "27일 4차 간담회에서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주 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인 통합 명칭과 주 청사 소재지 조율에 나섰다.

간담회 결과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시·도민의 이목이 쏠렸던 주 청사 소재지는 일단 두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통합시장과 통합 광역의회에 공을 넘긴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소탐대실하면 안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양보하고 통합 정신을 잘 살려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명칭과 청사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된 만큼 속도를 내 통합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며 "지역이 원하는 성장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4차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은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기동취재부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명칭은 '전남' 앞세우고 약칭은 '광주'로… 40년 만의 재결합 '물꼬'
28일 특별법 발의·2월 통과 목표… 20조 지원 골자 입법화 속도전

광주·전남을 통합한 초광역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최종 결정됐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청사 문제는 주청사(대표사무소)를 별도로 두지 않고 현재 운용 중인 광주시청, 무안 전남도청, 순천 동부본부(전남도 동부청사) 등 3곳을 균형감 있게 활용하기로 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제4차 조찬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은 2시간이 넘는 마라톤 논의 끝에 통합 지자체 명칭과 청사 문제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지난해 말 행정통합론이 첫 제기된 후 한 달 만이고 지난 2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통합을 공식 선언한 지 25일 만이다.

논의 결과 특별법 법안 등에 사용될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최종 결정됐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사용하기로 했다.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해 분리되기 전까지 한 가족이던 두 지역의 역사성과 대표성, 여기에 광주가 지닌 정체성과 '광역도시권'의 상징상, 용이성이 두루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 단체 명칭은 자치, 재정, 교육 분권 등 거대 담론과 광역·기초지자체 위상, 청사 문제, 직원 불이익 배제 등 특별법에 담길 핵심 조항들과 함께 치열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논쟁도 뜨거웠다.

명칭은 다양한 논의 끝에 '광주·전남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 등 2개로 압축됐고 지역 내 여론이 팽팽히 맞선 결과 전남으로 시작하는 '전남·광주특별시로 최종 합의됐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일종의 원윈 방식의 빅딜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위 김원이 공동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집중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통 큰 양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칭과 별개로 특별법에는 '광주 정신'도 명확히 담겼다. 총칙 1조에 특별법 제정 목적으로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 전남도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청사와 관련해선 3차 간담회에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으로 한다'고 발표되면서 광주지역 반발이 들끓었고 '주청사 논란이 통합 논의 전체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날 대승적 합의가 도출됐다.

강 시장은 "관련 법이나 대화 과정에서 주사무소는 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문제는 7월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 권한으로 둔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도 "합의가 잘됐다. 합의 정신을 잘 살려 미래를 향해 활발한 논의를 거쳐 통합특별시가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300여개 조문에 400개 가까운 각종 특례를 담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이르면 28일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달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지 40년 만에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양부남 공동위원장은 "법안 발의 후 상임위 법안 심사와 민주당 입법지원단 협의 등 주 트랙이 남아 있다"며 "충분한 숙의와 시도 의견을 넉넉히 반영해 정해진 로드맵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2면에 계속〉

/이승원 기자